

“경북시대 SOC사업 국비 투자 절실”

경북도, 국토부 예산협의회 참석
TK신공항 광역철도 등 5개 사업
설계 용역비 등 5550억 원 건의
지방 성장·균형발전 밀거름 강조

경북도가 국토부에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경북시대 성장 기반 핵심 SOC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16일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국토교통분야 주요 SOC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문경-김천 간 철도건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조4455억 원이며, 내년 국비 건의액은 5550억 원 규모다.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중부내륙(이천-문경)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과 중·남부내륙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철도망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00억 원을 요구했다.

철도 접근성이 낮은 낙후지역의 균형성장을 촉진시키는 남부내륙철도



“젓 먹던 힘까지” 16일 대구시 달성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실시된 '2024년 환경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시험 응시자들이 체력 시험을 치르고 있다. 5명을 뽑는 이번 공개 채용에 42명이 몰려 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훈진 기자 hj131@kyongbuk.com

(김천-거제)는 2030년 완공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4000억 원을 요청했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환동해권 지역성장의 기반이 될 사업으로 지난해 125억, 올해 1350억의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와 공사 조기 착수를 위해 국비 1200억원 반영을 제안했다.

특히 2030년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추어 유동인구 및 물자 수송 증가에 대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과 국비 30억 원을 주문했다.

취약한 동서축 도로교통망 확충과 서남부권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장은 “이번 건의 사업들은 경북시대 성장의 기반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핵심 SOC사업들이 적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국비 확보와 정책 절차 추진에 차질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尹-李 영수회담 가능성 열려있다”

대통령실 “국민을 위한 일 포함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수 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6일 “모두가 열려있다”고 밝힌 회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하지 않을까요”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

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단독회담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단독회담보다는 여당과 다른 야당의 대표들과 함께 나누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들과 아직 정식 회담을 한 적이 없다. 3·1절 기념식 등 공식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유일하게 지난해 10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함께했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대구보건대·영남대 - 금오공대 ‘글로벌대학 30’ 1차 관문 통과

교육부, 예비지정 33곳 발표
본 지정 평가 거쳐 8월 확정

경북대학교 등 경북대구권 연합을 포함해 5개 대학이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에 선정됐다. 지난해 한동대가 예비지정을 통과, 올해도 자격을 유지한 만큼 총 6개 대학이 올해 본 지정에 도전한다. 관련기사 3면

글로벌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 평가와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70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다.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으며 이 중 5개는 지난해 본 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이다. 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는 단독

으로 예비지정에 선정됐으며 영남대·금오공대 연합, 대구보건대는 광주·대전 보건대학과의 연합으로 예비지정을 각각 통과했다.

지난해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은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줬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이번 달 25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확정된다. 2면에 계속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경북도청 후적지, 미래산업 혁신거점화 탄력

대구시, 25일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앞두고 기본계획 마련 등 속도

지방 대도시 도심에 판교테크노벨리처럼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등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특별법은 시행만 앞두고 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공공이 주도해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형태다.

특구 내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현재 선도사업 지자체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대해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미래신성장 산업 복합 인프라를 구축해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집중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실시계획안 작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국토부 심의·승인 등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